

지방 국립대학 육성의 방향과 과제

두 재 균 | 전북대학교 총장

I. 들어가는 말

요즘, 시대의 변화를 절감하면서 살고 있다. 광복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모두가 서울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놓기 시작한 지방분권화의 이념이 서서히 힘을 발휘하면서 각계 각층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고등교육계만 보더라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각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방향을 정립하고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방화 담론이 없지 않았으나, 노무현정부가 들어선 지금 지방분권과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계의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변화는 '지방분권' 패러다임의 토대 위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존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 국립대학 관계자들을 매우 기쁘게 설레이게 하는 기분 좋은 징조이다.

이제 남은 것은 지방대학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과거처럼 '떡 하나 달라는 식'이 아니라 올바른 지방 국립대학 발전 방향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들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은 지방대학 육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의 제 1과제는 지역 내 우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점 역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본인이 이미 2002년 9월 1일 취임사에서 밝힌 '지역 - 대학 공동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동시적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표현은 다를지라도 이곳 저곳에서 새로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견해들을 참고하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생각하고 제시했던 지방 국립대학 육성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II. 지역의 인재육성이 지방 국립 대학 육성의 기본

민주주의의 꽃이 지방자치 실현이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활짝 핀 보기 좋은 꽃인가? 본인은 이 물음에서부터 지방 국립대학 육성 방향을 논의

“

능력 중심 사회는 학벌보다는 정당한 학력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정보화시대가
그러한 성취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

하고 싶다. 정치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힌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이미 십 수년이 지났다. 이로 인해 지역민의 삶의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한 지역주민의 정치적 역량도 한층 높아졌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지역 인재양성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것은 민주주의 꽃이라는 최상의 힘으로도 풀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지고지난의 문제인 것이다. 혹자는 이 문제를 학력주의의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은 학력이 이기주의화된 학벌주의에 연유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의 몇몇 유명대학을 나와야만 사회 주도층에 속할 수 있고, 이름 있는 기업체에 취직될 수 있는 병리적 현상은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 꽃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완상 전 부총리는 인적자원개발(HRD)과 관련된 정책포럼(2003.2.19)에서 학력주의는 지역 인재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방의 우수한 인적 자원이 학벌을 쫓아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고, 지방대학 출신의 우수 인재들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적 자원의 쓸림 현상은 지방대학의 인적 자원 육성 기능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또다시 인력양성과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무엇보다 학력에 기초한 부와 권력, 명예의 배분 및 세습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능력 중심 사회는 학벌보다는 정당한 학력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정보화시대가 그러한 성취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정보화시대는 말 그대로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흐르는 시대이다. 인터넷의 등장이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발달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거의 다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획득은 중앙 혹은 유명대학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 전달의 주된 보고(寶庫)로 간주되었던 기존의 유명대학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의 본질에는 정보화가 기존의 중앙중심 혹은 유명대학 중심의 틀을 해체시킬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지식기반 사회 구축은 지방의 총체적인 힘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 기회는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과제를 성립시킨다. 이 인재양성의 핵심적 역할은 지방대학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방대학 육성의 첫 번째 과제가 지역 인재양성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간에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많은 기업에서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야단이다. 기업들은 산업경쟁력의 저해요인으로 한결같이 산업인력의 부족과 질적 경쟁력의 미흡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기술직 인력의 경우 인력수급의 질적 미스매치가 심각하여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비효율이 크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어 왔다. 이는 대학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수요에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력수요의 분석·전달이나 대학의 인력양성과정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세가 결여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대학에서 양성·공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려면 대학의 교과과정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기업에서는 대학의 교과과정이 산업현장의 요구(needs)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학에서의 인력양성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인력수요와 대학의 인력양성을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정진화, 2003 : 69~71).

물론, 산학연계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방대학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지방대학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교육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며,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지방으로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도 변화해야 하며, 대학 간 M&A나 대학 내 경영혁신 등 스스로의 개혁도 필요하다.

그러나 산학연계교육의 활성화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산업과의 동반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산업인력 양성이란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가장 큰 문제가 현장과 괴리된 교육으로 인하여 지역산업의 인력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학연계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재정확보나 규제개혁 등 외부조건의 개선만으로는 대학의 인력양성기능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나 지방대학 졸업자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 역시 지방대학이 특성화되지 못하고 수도권대학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방대학의 인력양성이 본연의 기능을 찾아야 한다(정진화, 2003 : 86~87).

지역 인재육성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학력 중시의 인식과 사회적 관행이 심화되면서 지역은 점차 황폐해져 가고 있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에 국력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지역 인재의 유출 현상은 지속될 것이며, 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고갈되고, 지방산업의 입지는 설 곳을 잃을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화는 학벌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의식과 관행의 혁신 운동으로 출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지방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립대학은 국민세금과 학생들의 수업료로 운영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입학생 정원에서부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인사, 예산배정 등 대학행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효과적인 대학운영이 되지 못했다. 다른 사

“

지역 인재육성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학력 중시의 인식과 사회적 관행이 심화되면서
 지역은 점차 황폐해져 가고 있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에 국력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지역 인재의 유출 현상은 지속될 것이며,
 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고갈되고, 지방산업의 입지는 설 곳을 잃을 것이다.

”

립대학에 비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의 속도가 늦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구조조정,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신입생 선발방법의 다양화 등을 위해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 자체의 역량을 창조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Ⅲ. 지역 - 대학 공동체 형성

대학과 지역이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질 때, 지방과 대학은 상호 공존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 '지역 - 대학 공동체론'의 핵심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고, 그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다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지역 대학이 그 지역 발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아울러 발전에 대한 정책도 함께 제시하여 지역대학의 지향점이 중앙이 아니라, 지방으로 먼저 눈을 돌리는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이 배출한 지역인재들이 그 지방 발전을 위한 '인재풀'을 형성하고, 그 지방 발전을 위한

발전 정책을 제시하며, 그 인재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의 성취를 앞당기는 길이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모델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미국의 보스턴, 영국의 옥스퍼드 등과 같은 지방도시는 대학 특화를 통해 지방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의 스탠포드대학과 실리콘밸리가 보여 주고 있는 공존공영의 발전 방식처럼 지역의 인재가 그 지방에 있는 산업중심으로 진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지역은 괄목한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만일 앞으로 현제와 같이 지방대학과 지역간의 연계고리가 약하고 지역 역시 지역 대학에 인재 공급을 소홀히 한다면, 지방산업은 침체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고, 여전히 인재의 서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획과 지역혁신의 중추 역할은 지역의 대학들이 맡아야 한다. 지역 내 국립 대학에는 시대변화를 꿰뚫어보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는 지역 발전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있고, 세계와 지역 전반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관련 전문기자들이 있으며, 또한 현대 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첨단 과학기술자들이 몰려 있다. 이런 고급 두뇌들이 지역 내 모든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은 지역분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 - 지역 공동체는 지역 혁신체계(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s)의 개념과 맥을 같이한다. 지역 혁신체계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창출, 분배, 활용하는 과정에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기관간의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이는 학습지역(Learning Region) 구성과 관련되며, 학습지역 구성의 핵심 전략은 곧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이다. 결국, 지역의 지식기반사회화는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 혁신 및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며, 또한 지역 주체들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를 살리는 과정에서 지방대학의 육성은 필요불가결한 중대 사안이 되는 것이다(이정표, 2003 : 19~20).

이와 관련하여 윤덕홍 부총리(2003. 2. 18)는 대구대 총장 시절, 지역 대학들이 지역혁신의 중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첫째, 교수의 업적 평가 등에서 지방정부, 지역언론, 지역기업, 지역연구, 타대학 연구진 등과의 협력 활동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둘째,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해야 하며, 셋째, 대학 이기주의에 발목잡혀 대학간에 비생산적인 과열경쟁을 벌이지 않도록 자제해야 하고, 넷째, 대학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며, 다섯째, 지역사회(지역기업, 지역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가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대학의 공동운명체가 되기 위해 지역대학의 혁신역량을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지역언론 등에 공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지역의 대학 관계자와 대학교수, NGO 관계자, 연구소 관계자, 언론계,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지역혁신포럼'을 구성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수렴하고 여론형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지역 발전 방안 기획'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산업계와 연계한 사업 프로젝트 발굴', 'NGO와 연계한 시민사회 발전 프로젝트 발굴' 사업, 지역 대학의 연구소와 대학내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상대로 공모하여 우수 아이디어와 정책 대안, 사업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역 - 대학의 공동체론은 대학 나름대로의 지역 혁신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대학은 그의 모든 지적·기술적 역량을 지역에 쏟고, 지역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대학으로부터 얻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지역-대학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 전 분야에 있어서 산학연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일이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체계 구축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지방대학에서 산학연계 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소재 기업 간 산업 단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역산업의 인력수요가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산업 단위의 협의체를 통하여 해당산업에 고유한, 그리고 해당산업의 기업들이 공유하는 인력수요를 분석하고, 산업 단위에서 대학과 기업이 인적 자원 개발의 파트너로서 산학연계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인력 수요와 인력 양성·공급이 하나의 틀 안에서 유기

“

지역 - 대학의 공동체론은 대학 나름대로의 지역 혁신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대학은 그의 모든 지적·기술적 역량을 지역에 쏟고,

지역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대학으로부터 얻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은 지역산업의 성격과 각 대학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인력 양성 기능을 특화하고, 대학별 특성에 맞는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산업수요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이론 위주의 전공 지식 전수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실습교육과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적응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현재는 공학계열의 경우에도 대학 교과과정 개편에 기업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기업의 참여하에 산업현장의 기술개발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정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학협업체 등을 통하여 전공분야나 관련업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수요가 분석·제공될 경우, 개별 대학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한국공학원이나 전공분야별 학회, 업종별 협회 등이 연계하여 전공분야나 업종 차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지방 국립대학은 과거처럼 가만히 앉아 들어오는 학생을 적당히 가르쳐서 내보내는 안이한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고, 대학 연구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전문분야의 특성화와 다양화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있어야 하고, 관련 전문

지식과 첨단기술을 지역사회 발전프로그램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 지금 지방 국립대학은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임무와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이다.

IV. 지방대학 졸업생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지방대학 육성의 핵심 사안 중의 하나는 졸업생의 진로개척, 즉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취업은 곧바로 지역 내 우수인재 유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반드시 지방에서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 지역 인재가 자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지방대 출신의 우수 졸업생들이 지역 사회에서 책임있게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해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고학력자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 지역에 설 자리가 없다면 이는 곧바로 지방대학의 위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지방대학은 우선 인재들이 그 지방의 관공서와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지방에 일자리가 있고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다면, 굳이 서울로 상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방 기업들은 지방의 인재들을 무시해 왔고, 지방의 인재들 역시 지역 기업들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젊은이들의 상경을 부추기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서울로 취직을 했을 때 '성공했다'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처럼 지방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구도 속에서는 지방대학의 생존은 물론 지방분권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은 기업과 지역이 함께 인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역 인재들이 그 지방의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 기업에 대한 '신뢰와 정보'의 부족이다. 신뢰의 문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될수록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주체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지방대 졸업생들은 많은 정보매체를 통하여 서울에 소재한 기업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얻고 있다. 그러나 정착 지역에 소재한 기업 정보 수집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그 지역의 모든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졸업생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두재균, 2003. 2. 18 참조). 다시 말해서 지역마다 지역 인재들과 지방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구직과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이 기구가 설치되어 대학 내 취업정보센터의 교류를 활

성화시키면, 취업을 위한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 물론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재의 취업구조를 상당히 호전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광역자치 수준에서 취업정보시스템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시스템은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연합해 졸업자 혹은 취업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인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희망 취업 직군별로 취업희망자들의 특기와 이력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수록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지방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구인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한다. 이 두 개의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된다면 지역 인재들이 언제든지 지방 기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지방 기업들 역시 인재가 필요할 때 지역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지역 인재와 지방기업들이 수시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기업들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시스템만을 가지고는 지방대 졸업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역인재활당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세 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대생'의 실질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일은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지방대생의 차별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관공서와 기업에서의 고용문제이다. 지방대생이 받는 취업 차별은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시되어 왔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각종 통계지표를 통해서도 그

“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지역의 다른 대학의 역량을
지역 발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해야 하며,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시키는 리더십을 더한층 발휘해야 할 것이다.

”

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지방에 인재를 모아야 하고 지방대학에 인재가 모이기 위해서는 지방대생의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인재할당제'를 제도적으로 실시토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이나 각종 자격 시험의 선발에 있어 지역인구비례 또는 출신지방대학에 따른 할당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가 도입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와 같이 능력위주의 취업보다는 학벌위주의 취업문화가 정착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회균등의 사회정의 실현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적인 강제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001년 12월 전국의 지방대학 총장들이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한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보완하여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대학육성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내 대학 지원에 관한 규정 건'을 내용으로 한 '역내 대학 지원 조례' 제정도 시급하다.

V. 맺는 말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전라북도 도민과의 토론회 장소로 전북대학교 건지아카데미홀을 택했다. 노대통령의 지역분권이념과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본인의 노력도 있었

지만,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에서 도민 토론회를 가진 것은 그만큼 지방대 육성에 대한 그의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그의 의지는 대통령이 된 후 어느 지방에서 '지방을 살리는 길은 지방대학을 통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이리하고, 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 특히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혁신적 자기변화가 요구된다. 대학은 지역의 현실과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단지 이공계열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 역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열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한 지역-대학 공동체 정신을 심분 발휘하여 대학이 가진 모든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역 발전에 투여하고, 지역은 대학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운용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단지 이기적인 홀로서기를 주장해서도 안 된다. 지역의 다른 대학의 역량을 지역 발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해야 한다. 입학생 감소와 재정 고갈문제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내 여러 대학들의 우수 연구력을 결집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록 이끌어야 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지역 주민을 위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시키는 리더십을 더한층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전북대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학들 역시 자생력을 기르고,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거듭나기를 위한 지방 국립대학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 적어도 능력보다는 학벌주의가 판치는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특히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참고문헌

- 두재균(2003. 2. 18). 새정부 지방대학육성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양대학교.
- 윤덕홍(2003. 2. 18). 새정부 지방대학육성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양대학교.

이정표(2003. 4. 16). 지역 파트너십 관점에서 본 지방대학의 육성 방안. KRIVET 정책토론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진화(2003. 4. 16).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KRIVET 정책토론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완상(2003.2.19). 학력 중시 사회에서 능력 중시 사회로의 전환. KRIVET HRD 정책포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두재균

전북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전북대에서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 토마스제퍼슨 의대 객원교수를 지냈고, 현재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제표준화기구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부분자궁적출술」, 「머크-임상 의학 진단 및 치료」 외 다수가 있다.